
Global Report

2017년도 환경성 중점시책

1. 2017년도 환경성 개요
2. 2017년도 환경성 중점시책
3. 2017년도 환경성 기구 정원요구 개요
4. 2017년도 환경성 세제 개정요구 개요

1. 2017년도 환경성 개요

【일반회계】

	2016년도 당초예산액[억원]	2017년도			
		개요요구액 [억원]	우선과제추진 요망액[억원]	계 [억원]	전년대비 [%]
일반정책경비등	1,452	1,334	625	1,959	135

【에너지 대책특별회계】

	2016년도 당초예산액[억원]	2017년도			
		개요요구액 [억원]	우선과제추진 요망액[억원]	계 [억원]	전년대비 [%]
에너지대책특별회계	1,586	1,770	137	1,907	120
에너지공급계정	1,564	1,748	137	1,885	121
전원개발촉진계정	22	22	0	22	102

【합계】

	2016년도 당초예산액[억원]	2017년도			
		개요요구액 [억원]	우선과제추진 요망액[억원]	계 [억원]	전년대비 [%]
일반회계+ 에너지대책특별회계	3,038	3,104	762	3,867	127

【동일본대지진 부흥특별회계】

	2016년도 당초예산액[억원]	2017년도			
		개요요구액 [억원]	우선과제추진 요망액[억원]	계 [억원]	전년대비 [%]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회계 (부흥청 일괄계상)	9,153	7,895	-	7,895	86

2. 2017년도 환경성 중점시책

2.1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재생

동 일본 대지진의 발생 5년이 경과하고 부흥은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 더욱 가속이 요구된다.

(후쿠시마 현의 대응)

후쿠시마 현은 계획에 근거한 제염을 해세이 2017년도내에 완료하고 2017년도부터는 재해지의 복구·부흥·교정을 위한 스텝 업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간저장시설 정비 및 제거 토양 등의 지속적으로 반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거 토양 등의 감용, 재생 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삼림 방사선량 저감 대책의 모델 사업 등을 함과 함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 처리를 착실히 추진한다. 이어 예전의 경계 지역 내 등에서 멧돼지 등의 긴급한 포획 사업을 실시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서 방사선에 관한 주민의 건강관리 건강 이상 대책도 추진한다.

(후쿠시마 현 이외의 대응)

후쿠시마 현 이외의 지정 폐기물 등의 처리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방사성 물질 오염 대책의 가속화를 위한 조직 개혁)

방사성 물질 오염 대책의 가속화, 폐기물·리사이클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추진 체제의 일원화·충실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2 순환공생사회의 시책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 개발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어젠다」가 채택되어 동년 12월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제21회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2016년 5월에는 G7회의와 G7토야마 환경장관 회의가 개최되는 등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 걸쳐서는 일본 뿐 아니라, 향후 세계 전체의 환경 정책의 방향을 가리키는 중요한 회합이나 협정 채택이 잇따랐다.

2017년도에는 이들의 실시·실현을 향해서 지구 온난화 대책, 자연 공생 사회의 구축, 순환형 사회 형성 등의 각 대책 분야의 시책을 국내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2.2.1. 차세대에 연결하는 생활·사회의 변혁에 의한 지구 온난화 대책

(2030년도 목표의 실현)

2017년도에는 파리 협정에 입각한 지구 온난화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되다. 2016년 5월에 각의 결정한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에 의거 2030년도에 2013년 대비 26.0%삭감(2005년 대비 25.4%삭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COOL CHOICE」를 key개념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민생·수요 측면 변화하는 사업,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인 삭감을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 연계를 축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최대한의 도입과 철저한 에너지 절약 추진을 비롯한 가정, 업무 기타 운수 산업 에너지 전환 등 각각의 부문별 대책이나 대체 프레온 가스 대책, 국민운동(「COOL CHOICE」)의 근본적 강화 등을 착실하게 실시하여 국민 각계각층이 주체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중장기적 대응)

또, 카본 프라이싱의 검토, 2050년 80%삭감과 이후의 장기대폭 삭감을 위한 기술혁신과 사회구현, 사회·도시·지역의 구조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혁의 실천, 이산화탄소 회수·저장(CCS)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인 대응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적응 대책)

2015년 11월에 각의에서 결정한 「기후 변화의 영향 적응 계획」을 토대로 한 대응으로 기후 리스크 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충실, 히트 아일랜드 대책 등을 착실히 실시한다.

(국제적 대응)

2016년 중 파리 협정 발효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조기 체결 및 시행 규칙 구축 등에 힘쓰고 양자 크레디트 제도(JCM)등에 의한 뛰어난 환경 기술의 보급 촉진이나 환경 영향 평가의 국제 전개, 파리 협정 및 G7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제 공헌 등을 각국의 특성을 근거로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2.2.2 2030년도 목표의 실현

① 2030년도 목표의 실현을 위한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을 착실하게 실시

【주요 조치】(금액은 백만엔 단위)

<지역의 재생·에너지 절약의 보급 촉진>

재생 에너지 전기열 자립적 보급 촉진 사업(경제 산업성 연계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7,500(6,000)

- (신규)풍력 발전 등에 관련된 지역 설정 계획 도입 가능성 검토 모델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300(0)
- 상하수도 시스템에서의 성 CO2화 추진 사업

(일부 후생 노동성, 국토 교통성의 공동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3,400(2,400)

- 저탄소형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설비 도입 지원 【에너지 특별회계】 3,900(2,900)
- 폐기물 소각 시설의 여열 등을 이용한 지역 저탄소화 모델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500(200)

<민생 부문(업무·주택)의 저탄소화의 촉진>

- 임대 주택의 성 CO2축진 시범 사업(국토 교통성의 공동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4,500(2,000)

- 업무용 시설 등의 성 CO2축진 사업(일부 경제 산업성·국토 교통성, 후생 노동성, 농림 수산성 연계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8,000(5,500)

- (신규)폐열·샘물 등의 미이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저탄소 사회 시스템 정비 추진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2,550(0)

- (신규) 탈 프로판가스 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용 냉동 공조 기기 에너지 절약화 추진 사업

(일부 국토 교통성의 공동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6,300(0)

<운수 부문(물류·교통)의 저탄소화의 촉진>

- 물류 분야에서의 CO2감소 대책 촉진 사업(국토 교통성의 공동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5,200(3,700)

- 트럭·버스의 저탄소화의 추진(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 연계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3,965(3,965)

<금융, 사회 시스템의 저탄소화의 촉진>

- 지역 저탄소 투자 촉진 펀드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8,000(6,000)

- ESG투자 등 환경 금융의 충실·강화[일부 에너지 특별]4,868(4,068)

② 국민운동 COOL CHOICE의 근본적 강화 등

[주요 조치](금액은 백만엔 단위)

(신규)에너지 절약 가전 등 COOL CHOICE추진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9,888(0)

-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국민운동 「COOL CHOICE」 강화 사업 【에너지 특별회계】 2,000(1,700)

- 「유엔 ESD의 10년」 후의 환경 교육 추진비 316(218)

3. 2017년도 환경성 기구 정원요구 개요

3.1 본부

【기구 요구】

- 대신 관방 총무과 환경 정보 보안 대책 추진실장
- 폐기물·리사이클 대책부 폐기물 대책과 기획관
- 지구 환경국 지구 온난화 대책과 민생 대책 실장

【정원 요구】

- 지진 부흥 관련 이외의 요구(6명)
- 위기관리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한 체제 강화
- 정보 보안 대책, IT를 활용한 업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 강화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진행하는 국민운동 실시 체제 강화 등
- 지진 부흥 관련 요구(4명)
- 지정 폐기물의 착실한 처리를 위한 체제 강화 등

3.2 지방 환경사무소

【정원 요구】

- 지진 부흥 관련 이외의 요구(64명)
 - 국립공원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체제 강화
 - PCB폐기물 등의 조기 처리를 위한 체제 강화
 - 재해 폐기물 처리 체제 강화 등
 - 지진 부흥 관련 요구(49명)
 - 후쿠시마 환경 재생 사무소 관련(중간 저장시설, 방사선 건강관리 등)의 체제 강화
 - 지정 폐기물의 착실한 처리를 위한 체제 강화
- 또한 이 외에 방사성 물질 오염 대책의 가속화, 폐기물·리사이클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추진 체제의 일원화·충실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2017년도 환경성세제 개정요구 개요

4.1 세제 전체의 그린화 추진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탄소·순환형 자연 공생 등 폭넓은 환경 분야에서 세제 전체의 그린화를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 대책)

-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을 착실하게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 대책,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화석 연료의 청정화·효율화 등의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제 시책에 총당한다. 또 휘발 유세 등에 대해서 그린화의 관점에서 세금을 지구 온난화 대책 등에 우선적으로 총당한다.

(자동차 환경 대책)

- 2016년도 세제 개정 (2015년 12월 16일 자유민주당, 공명당)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 대책, 공해 대책의 추진, 오염자 부담의 성격을 감안한 공해 건강 피해 보상을 위한 안정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과세에 의한 그린화를 추진한다.

(삼림·자연의 유지·회복)

- 시읍면이 주체가 된 삼림·임업 시책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에게 동일하게 부담을 요구 하며 시정촌에 의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삼림 정비 등의 재원에 총당하는 세제(삼림 환경세(가칭)등 새로운 구조를 검토한다. 그 시기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한다.

4.2 그린화 조치

- 질 높은 주택 스톡 형성 촉진을 위한 리모델링 세제(소득세·고정 자산세) 【확충】
- 주택의 개수 공사를 내진 개수나 에너지 절약 개수와 아울러 내구성 향상 개수를 갖고 증개축에 따른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을 경우의 소득세 및 고정 자산세를 세액 공제의 최대 공제액을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이 외에 에너지 절약 개수에 관한 특례 조치의 적용 요건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와 관련되는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고정 자산세) **【연장】**

- 저공해차의 연료 등 공급 설비 천연 가스 충전 설비(4,000만엔 이상)및 수소 충전 설비(1억 5,000만엔 이상)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를 과세 표준을 최초의 3년간 2/3로 하며 적용 시한을 2년간 연장한다.

○ 코제너레이션 설비에 관한 특례 조치(고정 자산세) **【연장】**

- 코제너레이션 설비(열전 동력 발생 장치)에서 첨단성의 설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를 과세 표준을 최초의 3년간 5/6로 특례 조치의 적용 시한을 2년간 연장한다.

시험 연구를 행했을 경우의 법인 세액 등의 특별 공제(법인세, 소득세, 법인 주민세) **【확충·연장】**

- 시험 연구를 행했을 경우의 법인 세액 등의 특별 공제에 대해서 「시험 연구」의 정의 및 총액형(시험 연구비 총액에 걸린 공제 제도)공제율의 재검토, 더욱 고수준형(시험 연구비-매출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공제 제도)의 연장 등을 도모한다.